



평창동계올림픽 시민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리포트

제1호 2017.9.1 (월간)

facebook.com/pcolympicmonitoring

문의 : 문화연대 02-773-7707

겨우 여섯달 뒤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여섯달 뒤에?” 내년 2월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정작 한국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이 치렀던 많은 국제스포츠이벤트 -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 와 비교해보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저조한 지 알 수 있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언론기사도 대부분 ‘재정적자 우려’, ‘사후 시설활용방안 문제’, ‘예산낭비 사전홍보행사’ 등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차라리 2015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운동’이 벌어지던 때가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가리왕산 등 생태파괴와 맞물려 세계적 관심거리(?)가 된 조형물 ‘생각의 나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가까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정책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비리게이트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올림픽’에 대한 기대치를 애써 높였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남북단일팀 무산 등의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이은 악재로 인해 평창동계올림픽의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지요.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북핵문제’로만 이유를 돌리기엔 뭔가 허전합니다. 3수에 걸친 유치과정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과정에서 수없이 지적된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남겨둔 채,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적폐청산이 시작된 지금은 상황이 훨씬 나아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북한문제가 사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였기에, 지금의 상황을 대입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일테구요.

늦었지만,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싼 난맥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증요법으로 넘어가자면 평창동계올림픽에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올림픽 예산과 강원도의 재정적자, 경기장 및 관련시설 사후활용방안, 가리왕산 포함 파괴된 생태환경 복원,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관련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 추가 개발을 둘러싼 갈등까지. 문제는 이 모든 사안들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조직위원회와 몇몇 관료,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 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강원도와 평창은 올림픽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와 세금인상, 감당하기 힘든 올림픽 시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큼니다. 올림픽을 치른 많은 나라와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소식,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복원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천명한 것은, 그런 면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기왕에 하기로 한 올림픽, 제대로 해야지 않겠냐고요? 맞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남북평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고요? 그 또한 맞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어도 함께) 모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에 ‘문지마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이전에 조금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보았다면, ‘생명의 나무’의 재탕처럼 여겨지는 ‘김연아 조형물’ 논란이나 광화문 광장을 차지한 채 하루 이벤트로 끝난 ‘워터슬라이드’ 설치와 같은 무리수는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적폐청산과 민주주의의 실현이 필요한 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과 같은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도시는 많이 없어졌고, 이미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기존 시설의 활용)들 중 올림픽을 국가적 동원체제 확립과 사회저항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2020 도쿄올림픽) 경우나 IOC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받고 개최에 나서는(2028 LA올림픽, 18억달러) 경우가 생기는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해당도시 시민사회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구요(해외 도시들의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와 반대운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추후 정리하며 리포트에 신겠습니다).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유치과 해당 도시 및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경제, 환경, 문화, 평화’ 올림픽을 내세운 평창동계올림픽은, 현재 4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산증가, 부채확대, 생태파괴, 무리수 이벤트, 단일팀 무산 등 평창동계올림픽 앞에 놓여진 과제들 중 어느 것 하나 쉬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의 이후 관리운영 책임을 중앙정부(국민체육진흥공단)로 넘기려는 관련법 개정의 꿈수도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번호 모니터링 리포트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문지마 후원의 문제점, 국회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우리 <시민모니터링단>에서는 이 부분을 꾸준히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시민모니터링단 페이스북 페이지 : facebook.com/olympicmonitoring

이제 시작합니다 :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하며

이번 1호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언급한 ‘평창동계올림픽 예산과 강원도 부채’ 문제, 공기기업의 ‘깜깜이 지원’, 관련법 개정 움직임, 무리수를 두는 홍보이벤트 등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메가스포츠이벤트 관련 각종 해외사례에 대한 점검과 국내외 시민사회운동 관련 소식도 모니터링 리포트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평창동계올림픽 시민모니터링단>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시민모니터링단>은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평창동계올림픽모니터링단), 월1회 <모니터링 리포트> 발간 등의 활동을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 진행, 사후평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직접행동 기획을 통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메가스포츠이벤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함께 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더 많은 소식으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8월의 재정, 법제도 모니터 :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깜깜이’ 지원, 과연 누가 책임질까?”

1. 한국전력 등 공기업, 평창동계올림픽에 800억원 규모의 후원 결정

언론보도([한국일보 기사 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전력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후원 협약식을 갖고 400억원 수준의 후원금 약정을 진행했다. 한국전력 외에 한국수력원자력 120억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각각이 50억원 씩해서 11개 회사 800억원 규모였다. 작년 4월에 박근혜 정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해 결정을 하지 못하다, 지난 7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기업의 후원을 요청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보도에서는 다른 해외의 올림픽에서도 자국의 공기업이 후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지만, 한국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처럼 재정의 편성과 사용이 불투명한 곳은 많지 않다. 특히 평창 조직위는 이미 스포츠 토토의 추가발권을 통해서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심의없이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지원의 근거가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상의 초법적인 지원 규정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후 무리한 후원금으로 공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당장 전기료 인상 등 부담이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을 통한 ‘묻지마 지원’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적절한 이사회의 검토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2.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시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밝힌 총 사업비 규모는 13조원으로, 이는 2014년 10월 조직위원회가 IOC에 제출한 유치신청서에서 밝힌 8조 8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는 조세 특례와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현물 후원까지 포함하면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특히 2015년 당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아직 조직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시기도 미리 금융권 차입을 통해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14년 한해동안 차입금 상환액만 115억원에 이르렀다. 즉, 돈이 없을 때는 빚을 내고 돈이 있을 때는 그 돈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법 부처 예산이 9,372억원이며 이중 시설비가 7,311억원이고 개최준비지원에 1,666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7월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원래 정부안에 없었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되어 **560억이 추가로 배정**되었다. 강원도가 국고에 맞춰서 마련해야 하는 돈을 고려하면 총액으로 1,114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셈이다. 따라서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2,78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즉, 평창동계올림픽관련 예산은 조직위원회가 경기 개최를 위해 편성한 13조원 외에 정부나 지방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명목으로 편성한 별도 예산이 더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모니터링단은 관련 조사를 통해서 (1) 국회에서의 예산심의시 권한 밖의 추가사업을 반영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2) 현재까지 집행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어떠한지를 조사해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에 실을 예정이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6년회계년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대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평창올림픽 홍보지원 사업(20억원)은 대학생 페스티벌(6억원)과 미디어파사드2) 콘텐츠 제작(5억원) 및 설치(춘천, 평창, 강릉 각 1개소, 23억원), 각종 문화행사 개최,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 등(6억원)에 각각 50%의 국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5월말 현재 실적행액은 5억 5,400만원(27.7%)에 불과하다. 이는 특히 미디어파사드 제작 및 설치 사업이 설치 대상지역 협의, 입찰 준비 등으로 집행을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VR제작 사업은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적행이 부진하다(110쪽)

그만큼 제대로 사업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3.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 현황

평창동계올림픽 모니터링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대상 법률’과 ‘일반 모니터링 대상 법률’로 구분하여 동향을 제공한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련 법률이 추가 혹은 삭제 될 수 있다.

<집중모니터링 대상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대표, 발의: 2016. 9. 현재: 상임위 계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담지기하려는 법률로, 지을 때는 마음대로 짓고 그것의 부담은 온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올림픽 ‘먹튀 법률안’임.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대표, 발의: 2016.9. 현재: 상임위 계류): 강원도 해안과 산간에 올림픽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 해주는 것과 동시에 사전재해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올림픽 빙자 막개발 특혜법’임.
- ‘[조례특별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대표, 발의: 2016. 10. 현재: 상임위 계류) 현재 올림픽 조직위 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이를 국내기업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으로 올림픽 마크만 달면 면세되는 ‘007 탈세면허법’임.

<일반모니터링 대상 법률>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대표, 발의: 2017. 7. 현재: 상임위 계류):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올림픽 참목법’임. 도대체 이렇게 하면 올림픽 홍보는 어떻게 할런지.

8월의 강원도, 문화체육관광부 모니터 :

“성공기원이 아닌 실패기억?”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사업, 정말 문제많다!”

1. 성공기원이 아닌 실패기억이 된 올림픽 홍보 사업

1) ‘생명의 나무’, ‘김연아 동상’은 준비운동일 뿐, 강원도 50억 예산들여
높이 40m 올림픽 상징 조형물 제작 들어가

언론보도(아시아 경제 기사 참조)에 따르면 강원도 올림픽 190여
일 앞두고,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같은 세계적인 조형물 건립 추
진. 50억 예산에 높이 40m(알펜시아의 높이의 1.5 배) 평창올림픽
상징조형물 사업 발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강원도는 지난 4월 자
체 사업으로 올림픽상징조형물 사업비 62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6월 12일 긴급 제안공모를 냈고 7월 12일 상징조형물 디자인 제작
및 설치업체를 선정한 것.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은 단 한 차례도 열리
지 않았다.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일자 도 관계자는 조형물은 디
자인이 나오면 기초공사를 하고, 구조물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150일은 제작에 충분한 시간이다”며 “일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지적하지만, 상징조형물 공개는 올림픽 개
막식 이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디자인 등에 대해 오히려 극도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함.

그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으로 제작된 조형물, 이를테면 높이 33m
에 LED 40만개를 달아 만든 '생명의 나무'와 최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및 수치대 4곳에 세워진 동계스포츠종목 선수 인물을 본
판 인물상 등 발표 될 때마다 여론으로 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기에
이번에 대규모로 진행하는 조형물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큼.



소식을 접한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김연아 동상. 4개 제작에 1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2) 촛불혁명의 힘을 올림픽으로 치환시키려는 작전 : 반쪽 행사된 10억 짜리 광화문 봅슬레이 워터슬라이드

8월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광화문 광장 “도심속 봅슬레이”워터슬라이드 행사가 20일 오전으로 취소되어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이에 예산 낭비, 정치적 서커스 민주주의 표퐁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시설의 안전성, 광장에서 관주도로 스포츠 홍보 행사를 하는 것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도심속 봅슬레이는 길이 300미터, 높이 22미터로 제작된 워터슬라이드에 봅슬레이를 형상화한 튜브를 타고 내려 오는 놀이시설이다. 이틀간 행사 진행 비용은 10억 원으로 서울시와 강원도가 각각 2억5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기업에서 5억을 후원했다. 오전 취소 문제와 더불어 시설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안전 문제는 행사 첫날 페이스북에 행사 시설 모니터링 글을 올려 230회 이상 공유된 김찬식씨 지적에 따르면 워터 슬라이드 뼈대를 이루는 동발이 비계 바깥쪽 경계에 안전 보드 판 없이 천으로 가렸다. 혹여 슬라이드를 타다 사람이 튕겨져 나갈 때 비계에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슬라이드장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 또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 올라가는 임시 철제 계단은 수많은 비계 동바리가 연결했는데, 이동할 때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비계 내 계단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비롯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모 없이 비계 난간을 잡고 이동하고, 계단 좌우에 안전판 보드가 아닌 휘장막으로 안전기준이 매우 취약했다.

광장에서 스포츠 홍보용 행사가 열리는 것에도 많은 공론이 생겼다. 이미 8년 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2009년 12월에 열렸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던 '2009 스노우 잼'과 '2009~2010 시즌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가 그렇다. 서울시는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높이 34m, 길이 100m의 점프대를 설치했다. 행사의 예산은 17억 원였는데, 서울시에서 5억원, 행사 참여 기업들이 12억원을 마련했다. 이때도 행사 취지 중 하나가 평창올림픽였다. 다만 올림픽 유치 전이라 성공적 개최가 아닌 성공적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였다.

다시 도심 속 봅슬레이 행사로 돌아가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8월 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역동성이라는 건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인데 아직은 촛불집회 때 나타났던 힘들이 올림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사 홍보를 끌고 오려고 한다. 이달 19~20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는 '도심 속 봅슬레이'도 그런 노력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행사 첫날인 2017년 8월 19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 북쪽에서는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등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완전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5주년 집중결의대회 열렸다. 근데 유동인구가 많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보면 봅슬레이 행사 시설물에 가려 5주년 집중결의대회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와 맞물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자가차량 아닌 대중교통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도 대두됐다. 광화문 광장에서 발화된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광장을 자신들의 치적 쌓기 장소로 여기는 모양새다.

8월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모니터 :

“국정감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방안’ 검토 계획”

1. 너무도 늦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방안’ 대책 : 2017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

오는 10월에 열릴 국정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SOC, 경기장 건설비 등으로 약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경기장 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효율적인 관리·활용방안에 대한 계획과 함께 올림픽 개최기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통해 사후활용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분산개최안에 따른 예산 절감 비용〉

(단위 : 억원)

	분산개최안			예산 절감 비용	
	1인	2인	3인	최소	최대
개·폐막식장	강릉종합운동장			1,178	1,178
알파인 스키경기장	평창지역 스키장 (2RUN 규정 적용)	무주리조트	마식령스키장 (추정 불가)	3,682	3,924
스노보드/프리 스타일 경기장	하이원리조트	마식령 스키장 (추정 불가)		545	545
빙상종목 경기장	일부 수도권 분산	전종목 수도권 분산		3,020	4,790
슬라이딩센터	나가노(추정 불가)			-	-
합계				8,435	10,437

출처 :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정책제안서(2015,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2015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촉구하는 시민모임(이하 평창분산개최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재정계획이나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경기장, 숙소 등을 비롯한 올림픽 시설물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평창분산개최시민모임은 올림픽 반납이 재정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나, 현실적인 조건이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고려해서 분산개최라는 차선택을 제시했다. 개·폐막식장의 경우 강릉종합운동장을 활용하고, 알파인스키장은 평창의 다른 지역 스키장이나 무주리조트, 스노보드/프리스타일 경기장은 하이원리조트, 빙상종목은 수도권 경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 제안에 따르면 경기장 건설비용만으로도 8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제정세나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하는 북한의 마식령스키장이나 일본 나가노의 경기시설을 빼고, 국내의 기존 경기시설을 적극 활용하자는 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정부, 강원도, 문화부 등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자신들의 원안대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 이미 경기장 공정률이 90%를 넘어서도 있는 시점에서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을 고민하자는 주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한 이야기이다.

[시사저널]평창에 드리워진 인천아시안게임의 그림자(2017.8.18.)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0936>

[연합]하늘로 땅으로...올림픽 가는 길' 빠르고 편리하게(2017.8.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9/02000000000AKR201708190519000003.HTML>

[뉴스1] 개·폐회식장 공정률 85.7%...경기장은 평균 96.53%(2017.7.23.)

<http://news1.kr/articles/?3054957>

2. 문화부,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해 총력전, 하지만 결과는?

문화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달 29일에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평창올림픽지원과를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격상시키고, 제2차관의 소관이었던 관광분야를 제1차관 소관으로 변경하였다.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화부의 복안이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 관계자는 ‘부의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문화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에 절박함과 강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로 곤욕을 치른 문화부는 이번 올림픽을 문화·체육 행정에 대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다시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의 전담인력을 두 배로 증원하고 지원단장을 노태강 제2차관에게 전담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 때 보였던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이 올림픽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발언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의 상황은 평창동계올림픽은 유치와 준비과정에서부터 보여진 진행과정의 불투명성과 각종 비리들, 여론을 무시하고 관주도로 진행되어 온 추진과정들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쌓인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보여준 방식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수백여 건의 문화행사와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붐슬레이 행사와 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뿐이다.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문화부는 올림픽의 붐업보다는 진행과정의 불투명성과 비리들을 공개하고, 국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영암F1과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예산낭비와 지방재정 파행에 대한 여론의 걱정을 해결할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뉴스1]콘텐츠·체육·관광실 '국 체제'로 전환 등...문화부 조직 개편(2017.8.29.)

<http://news1.kr/articles/?3085302>

[연합] "사활 걸겠다" 올림픽 준비 총력전 나선 문화부(2017.8.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8/02000000000AKR201708181057000005.HTML>

[한국경제]도종환 장관 "촛불집회의 힘 평창올림픽으로 잇고 싶다"(2017.8.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071307Y>

[MK스포츠]쇼미더머니 인기 '100'이면 평창올림픽 관심은 '1' 수준(2017.8.29.)

<http://sports.mk.co.kr/view.php?>

[sc=71000005&year=2017&no=577202](http://sports.mk.co.kr/view.php?sc=71000005&year=2017&no=577202)